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15
----------	------

발의연월일 : 2024. 8. 20.

발 의 자 : 김남희 · 김선민 · 송재봉
김정호 · 박상혁 · 이연희
장종태 · 남인순 · 이수진
김 윤 · 정성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성폭력범죄, 성희롱,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하는 때에는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소청심사청구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하는 규정은 없어, 피해자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 성희롱,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소청심사청구 사실 및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8항).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소청심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처분에 따른 경우에는 소청심사청구 사실 및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3.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7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및 심사의 청구) ① ~ ⑦ (생략) <u><신 설></u>	제67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및 심사의 청구) ① ~ ⑦ (현행과 같음) <u>⑧ 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소청심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처분에 따른 경우에는 소청심사청구 사실 및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u>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u> <u>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u> <u>3.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u>
<u>⑧ (생략)</u>	<u>⑨ (현행 제8항과 같음)</u>